

외지·대형업체 배만 불리는 도내 건설공사

지역 건설업체들이 도내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금액의 절반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내 업체들의 수주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이들 수백 개 업체가 나눠 가져가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발표된 연간 도내 건설공사 발주금액은 총 4조395억원이다. 이 중 9월 말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전체의 21.2%인 8,555억원에 불과하

올해 연간 발주 금액 4조원 대 중 지역 업체 수주 비율 20%대 불과 대형공사·SOC사업 싹쓸이 - 도내 업체 "고사 위기 보호책 필요"

다. 설계금액은 1,000억여원에 그쳐 도내 전체 건설업계의 수주금액은 1조원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전체 건설공사금액 4조 2,309억원 중 도내 업체는 33.7%인 1조 4,286억여원을 수주하는데 그쳤다.

2012년과 2013년 총 발주금액은 각

각 2조4,762억원, 2조8,573억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조2,711억원, 1조4,667억원 등을 도내 업체가 가져갔다.

이처럼 도내 업체들이 수주하는 연간 공사금액은 전체 공사금액의 증감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이는 대형공사나 SOC사업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 도내 건설사가 아닌 대형업체 또는 외지업체들이 대부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연간 공사금액이 10조원이 넘어도 수도권·대형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도내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은 2조원이 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업체 보호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 도내 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건설업계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국토부 장관에 강호인 해수부 장관에 김영석

靑, 부분 개각... 6개부처 차관인사



강호인 내정자



김영석 내정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강호인 전 조달청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분 개각 및 청와대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강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김 해수부 장관 내정자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해양정책국장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사무차장·국제관장, 대통령비서실 해양

수산비서관 등으로 일해 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기재부 2차관에 송언석 현 기재부 예산실장, 교육부 차관엔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외교부 1차관엔 임성남 주영국 대사, 국방부 차관엔 황인무 전 육참 차장, 보건복지부 차관엔 방문규 기재부 2차관, 해수부 차관엔 윤학배 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을 발탁했다.

또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국가안보실 1차장도 개편했다. 외교안보수석으로는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임명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금융당국, 내년부터 회계기준 강화

‘공사원가’ 공시 추진 건설업계 강력 반발

내년 2분기 사업보고서부터 개별 프로젝트의 총원가와 진행률 예상 손실을 주석에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재무정보 신뢰성을 위해 이 같은 회계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반해 건설업계는 영업기밀이 노출돼 수주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 제 1011호 건설계약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 대비 일정 규모 이상 차지하는 수주 계약 건은 사업

별로 총계약 원가 등의 항목을 주석 공시 사항에 추가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시사항은 △추정 총계약 원가 △직전 회계연도 말 이후 원가의 변동 금액·변동비율 △누적발생 계약원가 △진행률 △예상 손실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 △미청구공사와 손상차손 누계액 등 7가지다.

또 2018년 시행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 15호 공시사항이 내년 2분기에 조기 도입된다. 보고기간에 인식한 매출채권 또는 미청구공사의 손상차손을 공시하고 건설계약 수익의 지역, 시장유형, 고객유형 등을 범주별로 구분하는 한편 보고기간에 생긴 미청구공사 잔액의 유익적 변동을 설명해야 한다.

회계기준원 측은 조선·건설업종의 재무정보 신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보가 용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시가 필요하다는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투입 원가율이 100%를 넘는 사업도 수익을 과도하게 잡는 등 진행률 산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원가율 자체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추정 총계약 원가의 신뢰성을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형 건설업계는 원가율 손익 등 세부내역을 공시할 경우 영업기밀이 발주자와 경쟁사에 노출돼 수주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공사별 원가 등 항목을 추가로 공시하는 것은 IFRS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사항을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과도한 규제이며, 건설·조선업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IFRS 15호 공시사항을 조기 도입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해외 업체와 경쟁하는 산업인 조선·건설업이 원가 정보를 공개하면 기업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해외플랜트는 설계와 동시에 구매, 시공이 진행됨에 따라 공사 종료시점에야 원가 추정이 가능하다”면서 “공시 확대로 ‘빅베스’ 문제가 해소될지 의문이며 업체가 부담하는 시간·인력 비용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개별공사 기준의 공시 강화보다는 그 대안으로 분류기준 수위에 따라 범주별 총액으로 공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회사별 반대 의견과 이유를 담은 설문지를 모아 회계기준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한 회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금융당국과 협의 시에도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정호기자 won@

회계기준원, 건설계약 개정안 마련
IFRS에도 없는 ‘과잉규제’ 논란
“영업기밀 노출·수주경쟁력 약화”